

# 한국의 개조 : 균형의 길 발전동력을 살려라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낙 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일 시 : 2017년 3월 2일(목) 14:00~17:00
-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리더십 한림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 목 차 >

제 II 장 경제정책 .....	29
1. 산업 氷壁(ICE CLIFF)의 생존전략 .....	29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30
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31
4. 산업간 융 복합 연계성 강화 .....	32
5. 창업·벤처기업의 지원방안 .....	36
6.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	38
7. 경제민주화 .....	4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저자 소개 】

### 【약 력】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학 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경 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전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강의(복지경제, 복지재정)  
Chairman, APEC, Ad Hoc Committee, SSN, 2000.



### 【주요저서】

연구활동 : "The Balanced Way", (출판예정), "생산적 복지"2000, "균형적 복지국가",  
"국민연금재정추계수리 모형",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논 문 : "아시아 경제공동체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 U.S.A.  
"Altai 문화협력 구상", 2015

### 【약 력】

최낙삼 (현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학 력 : 1981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1983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  
1990 (일본) 규슈대학 종합이공학연구과 박사 취득  
199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기계공학과 박사후 과정

경 력 : 1981~1986 대우중공업 생산기술센터  
1990~1995 (일본) 응용역학연구소 조교수  
1995~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재임중, 공학기술연구소장, 대학평의원 역임  
2013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회장  
2017 한국복합재료학회 수석부회장  
2015~현재 한국연구재단 공학분야 전문위원



### 【주요저서】

논문 및 수상 : 국제 저명학술지 99편, 국내학술지 78편, 국내외 학술상 수상: 9건  
한양대학교 Best Teacher상 수상.

저 서 : 전공분야 국내 3권, 국외 1권, 역서: 1권

# 제 II 장 경제정책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17. 3. 2

## 1. 산업 氷壁(ICE CLIFF)의 생존전략

### \* 산업 氷壁(ICE CLIFF)극복의 자생력 발전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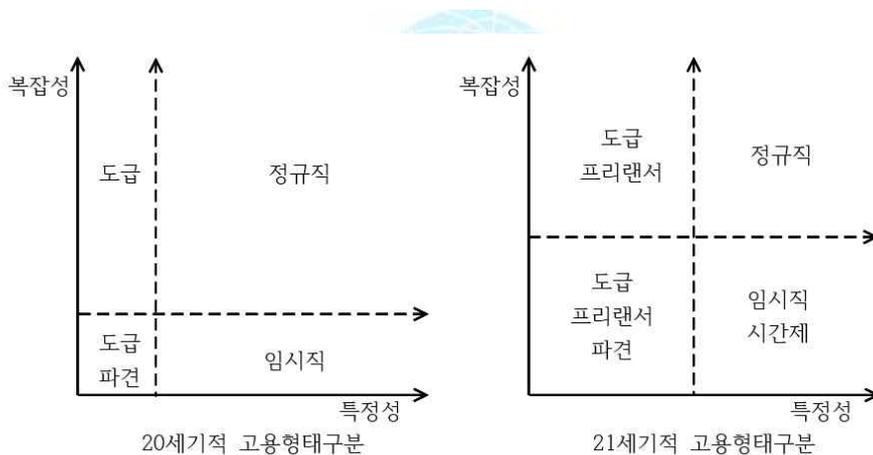
- 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양자 FTA 확대
- ②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 인공지능 융합 자동화, 현지시장 기호
- ③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특수기호 적합 첨단융합
- ④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자생력자극 발전동력
- 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첨단기술 융합, 발전동력
- ⑥ 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 확산: 최적효율 적합기술
- ⑦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국내협업 회귀
- ⑧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6-44(통권 717호) 2016.11.04

##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일자리의 모습

- ① 세분화된 작은 업무와 온라인 업무 증가, 여러사람 네트워크 통한 수행
- ② 일자리가 단기간 프로젝트 형으로 전환, 계약이 짧으며 일은 단속적 진행
- ③ 사용자를 만날 필요 없이 상호함의 따름, 고용관계 개별화, 근로시간 유연성
- ④ 하나의 근로자가 동시에 여러 사용자를 위해 일할 수 있음(다종류 job)
- ⑤ 근로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고, 근무장소 구분 불명, 근로기준 모호
- ⑥ 정형화 업무는 자동화·프로그램화되고, 사람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
- ⑦ 근로자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경쟁 심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환영



### 정책 방향

- 4차 산업혁명 이끌 창의적 인력 배출위한 경직적 교육체계 개혁
-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기업·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향상
-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이동(mobility)이 증가,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이 심화를 해소한 사회안전망 보강

<출처>'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좌장: 서강대 남성일, PM: 노동연 허재준)노동부, 2017.2.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 사업방향(자율발전 동력자극)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R&D 및 해외마케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 자율발전 동력
- \* (선정요건) ①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25억원)~1,000억원, ②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③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 2011~'16년간 총 704개社 선정하여 241개社 지원 중('17년은 신청중)

#### □ 지원규모 : 305억원(R&D : 255억원, 해외마케팅 : 50억원)(2017)

구분	내역	수행기관	비고
R&D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과제 '자유응모' 방식 지원 *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기정원	255억원
해외마케팅	브랜드개발, 동영상제작, 해외전시회 등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수출바우처	50억원
지역 자율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등(지역별 차등)	지역혁신기관	각 지자체
연계지원	보증·보험, 이자감면, 컨설팅 등	신한, 무보 등 7개	11개 시책

- R&D :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 지원(총 사업비의 65% 이내)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과제 지원(자유응모)
-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 부담)
- 해외마케팅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소요금액의 60%이내)
- 지역자율프로그램 : 신규 선정 기업당 2천만원(각 지자체별)

#### 4. 산업간 융 복합 연계성 강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연계 네트워크 분석 -

-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주요국과 비교 시 선진국보다 크게 낮고 중국, 멕시코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에 해당
  - \* 한국 0.23, 프랑스 0.52, 미국 0.41, 독일 0.40, 일본 0.40, 중국 0.29, 멕시코 0.25
-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확대될수록 과거에 실현 불가능했던 새롭고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생태계, 생산, 소비, 신산업 창출이 가능
  - 특히, 융·복합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성 확대와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한 초기 시장의 확보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괴리로 인해 제조업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가 낮으며 그 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 또한 낮음
-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 최근의 경제는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21세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의 대부분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에 기반
  -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불리는 디지털-기계-인공지능의 결합은 실제세계와 가상세계를 초(超)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산업상의 거대한 기회를 제공
- 제조업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는 산업간 연계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
-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이종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신상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

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6 호 | 2017-06 | 2017.2.6.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

- 국내 산업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연계성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
  -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산업은 연결망의 허브(hub) 역할을 하면서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적 구조가 관찰
  - 우리나라 산업네트워크상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분리가 확대
  
- 2014년의 경우 2005년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 간 연계성은 약화되어 서비스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이 제조업들과 괴리
  -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적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제조업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는 산업간 연계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
  - 신기술 등장에 따른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진(coevolution)적 발전을 위한 산업내 혹은 산업간 연계성 확대방안 모색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 필요

2)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 최근의 경제는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21세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의 대부분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에 기반
-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불리는 디지털-기계-인공지능의 결합은 실제세계와 가상세계를 초(超)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산업상의 거대한 기회를 제공

-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확대될수록 과거에 실현 불가능했던 새롭고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생태계, 생산, 소비, 신산업 창출이 가능
- 기존의 '업(業)'과 '업'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현존 비즈니스 모델이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뛰어넘는 변혁이 도래할 전망
- \* 우버(Uber)는 모바일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해 차량과 승객을 중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자사 차량을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도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의 시가총액을 추월

###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어려움

-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태계는 기반기술 발전 → 산업플랫폼 구축 → 기존 산업 혁신 → 신산업 출현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의 경로로 발전
- 복제나 캐치업(catch-up)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상 기반기술의 개발이 중요
- 특히, 융·복합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성 확대와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한 초기 시장의 확보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 4) 우리나라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괴리로 인해 제조업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가 낮으며 그 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 또한 낮음

-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매우 부진
- 서비스 중간재 투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품질)이 낮아 제조업 중간재로서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한 제조업-서비스업 연계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신사업, 신산업 창출은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간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한 결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연계성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

#### 5)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

-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
  - 하지만 일부 산업은 연결망의 허브(hub) 역할을 하며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적 구조가 관찰
  - 우리나라 산업네트워크상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리가 확대  
산업고도화의 주요 경로 중 하나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두 부문의 혁신, 신사업, 신산업, 새로운 생산방식의 창출임
  -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2005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구분이 좀 더 뚜렷해져 두 부문 간의 연계성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계성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부문 접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

#### 6)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이 제조업들과 다소 괴리되어 주변부에 머물러 있음

-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서비스업의 미발달과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  
(중심산업)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국내 산업 네트워크의 중앙을 지배하는 가운데, 최근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중앙성은 증가
- 2005년에 비해 2014년 전체 네트워크 중심화지수는 내향 및 외향 기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5. 창업·벤처기업의 지원방안

### 1)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제도 도입 벤처투자 활성화

(현행) PEF가 벤처투자 기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투자기구 대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족

(개선) 창업·벤처전문 PEF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벤처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제공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

\*\* 법인세 공제(취득가액의 5%), 소득 공제(투자금액의 10%),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시기) '17.1.1 (자본시장법)

⇒ (기대효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및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벤처 투자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확대

### 2) 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현행) 개인은 벤처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내국법인은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음

(개선) 투자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신기술창업 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후 7년내 유상증자 납입

⇒ (개선효과)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시행시기) '17.1.1 (조세특례제한법)

### 3)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현행)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의 신생기업은 인지도와 공공 납품 실적 부족으로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 발생

(개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venture.g2b.go.kr) 구축 및 등록제품 확대

- 품질평가·기술평가 면제대상\*은 개별부처의 평가·추천 없이도 조달청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나라의 등록 제품을 확대

\* 개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 등을 받은 제품

(시행시기) '16.10.12

⇒ (기대효과) 아이디어·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 4) 클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

- 스타트업 전용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증권의 매매 허용

(현행) 개인투자자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증권을 취득시, 해당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매매가 제한

(개선) '16.11월에 개설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매매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투자자는 자유롭게 매도/매수가격을 제시하며 스타트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음

(시행시기) '17년 상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대효과) 증권 매매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져 클라우드펀딩투자의 매력도가 상승

## 6.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 2017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스마트화 및 경영혁신 등을 위해서 총 203억 원의 예산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와 공용활용시스템(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7년도 중소기업정보화역 강화사업』 계획을 발표
  
-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 혁신과 최신 정보화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203억 원의 예산 지원 예정.
  - (생산현장디지털화:150억, 250개사)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하여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구축: 40억, 9개 업종)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동 활용시스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을 개발·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13억, 33개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개선
  - 수출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하여 수출과제를 신설하여, 중소제조기업과 정보기술(IT) 공급기업간 컨소시엄,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수출
    -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제품 및 IT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수출
  - 또한, 참여횟수 제한 폐지, 사업공고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사업참여를 위한 컨설팅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손쉽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7년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3개 세부사업, 203억원)

(단위 : 개사)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생산현장 디지털화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최초 도입	50%, 최대 6천만원까지
	보완과제	기존 생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50%, 최대 4천만원까지
	확장과제	기존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 추가 구축	50%, 최대 1억원까지
	수출과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수출지원	60%,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50%, 최대 1천만원 까지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개별 협·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한 솔루션 구축지원	70%,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일반과제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50%, 최대 4천만원 까지
	해외연계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50%, 최대 3천만원 까지

## 7.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개념: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이념중립적 개념
  - 정치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적 의사결정체제에 도입, 개별경제주체의 시장참가가 아니라 조직화된 노동자 집단(stakeholder) 조직 간의 협상에 의한 경제의사결과정의 지배 (유럽)
  -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투자된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재벌그룹 총수의 1인 체제 구축. 한 계열사가 위험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어려워지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1998년 외환위기)
  - 순환출자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지배하려고 사용하는 핵심 수단
  - 한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면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하면 A사는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C사가 A사에 출자하면 A사는 자본금이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결된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그룹은 15곳)
- 금산분리 강화 : 지배구조에 '직격탄'
  -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는 재벌개혁의 핵심.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권장. 현재 금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대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음. 그러나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소유는 따로 분리하지 않아 사실상 '은산(은행·산업)분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의 상호출자나 자본이동이 차단되면 계열사 간 연쇄 부실의 위험이 줄고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사금고화' 행태가 사라질 수 있음. 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 계열사를 소유한 재벌그룹은 지배구조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 예컨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어서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현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없음. 삼성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밑에 삼성화재, 삼성캐피탈 등을 두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1) 경제민주화의 개념

- 헌법 119조 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헌법 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 자유경제질서

②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 규제와 조정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헌법재판소와 학계의 합의된 다수 해석)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헌재 1996.4.25, 92헌바47 등)

“사회정의 또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장경제개입을 용인하는 수정자본주의 질서를 의미”(헌법학자 다수견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중간에 있는 모든 수정자본주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 2)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

- 30대 기업집단의 작년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을 정도다. 이런 집중화는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달고 있다. 그러

나 한국이 냉혹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성장에 지나치게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30대 기업집단 매출, GDP 첫 추월 하지만 재벌사들이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몸집 불리기에 성공하고서도 사익 추구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숙명여대 경제학과 유진수 교수는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성공하면 그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특혜를 받아왔고,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 소비자에 비해 비싼 가격을 감내해 왔다"면서 "온 국민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들인 만큼 성공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

### 3) 총수일가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격후려치기

- 총수일가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격후려치기, 중견기업의 기술 및 인력탈취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경쟁 행위사례가 다수 보고
- 특히 물류, 광고, SW 등 서비스업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 현상 발생 게다가 일부 재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증가로 법치주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 대두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형량과 사면이 증거로 거론

### 4) 고용구조 양극화

- 고용구조 양극화의 생산시장 측면 원인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정체 최근 일자리 창출양상에서는 기업규모(사업체 규모)별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일자리 창출 정체와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중견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정체
- 남성고기능 근로자의 경우 300~49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정체가 일자리 창출 정체의 원인임을 시사

- 남성 저기능 근로자의 경우 10~99인 사업체에 속한 비중과 500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비중 증가, 100~499인 사업체에 속한 비중 감소
  - 저기능 일자리의 양극화가 중견기업의 역할 정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
  -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도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좌우
  -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 - 36%, 미국 - 70%, 독일 - 82%, 중국 - 72%, 대만 - 56%
  - 국제경쟁력이 있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강소기업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서 양극화의 산업측면 원인. 특히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hidden champion: 숨은 챔피언)이 중추를 담당하는 경제로 지칭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구축

